

2011 년 인권보고서

대한민국

EXECUTIVE SUMMARY

대한민국(이하 한국)은 대통령제(이명박 대통령)와 단원제 국회를 통치체제로 하는 입헌민주주의 국가이다.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진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다수석을 차지했다. 보안 기관은 민간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

중요한 인권 문제들로서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들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터넷 이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사례와 군대 내 가혹 행위들이 보고되었다.

그 외의 인권 문제들로서 일부 공직자 부패, 성폭력 및 가정폭력, 아동 성매매, 인신 매매, 외국인·탈북자·에이즈 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근로자 권리의 제한 등이 있었다.

정부는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들을 기소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면책이 허용됐는지 여부는 불분명했다.

제1절. 인간의 고결성에 대한 존중

a. 임의적 또는 불법적인 살인

정부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한 임의적 또는 불법적인 살인에 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당해 연도 중에 군대 내에서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 중 10명은 가혹 행위, 부당한 대우, 군대 부적응이 자살의 원인이었다. 국방부는 이들 자살 사건에 대한 외부 조사를 실시했으며 관련자가 구속된 사례는 없었다. 국방부는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b. 실종

정치적 동기와 관련된 실종에 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c. 고문 및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법률은 이러한 관행을 금하고 있으며 정부 당직자가 그러한 관행을 적용했다는 보고는 없었다.

당해 연도 중에 국방부는 상해를 초래한 가혹 행위를 14건 보고했다.

교도소 및 구치소 환경

교도소 및 구치소 환경은 음료수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했으며, 정부는 외부 인권감시단체의 시찰을 허용했다.

법무부는 12월 현재 수용자 수는 총 45,038명이며 이 중 2,429명이 여성이고 456명이 미성년자이고 14,405명이 미결수용자라고 보고했다. 비정부기구인 국제교도소연구센터(ICPS)에 의하면, 한국 내 교정 시설은 최대 44,430명을 수용할 수 있다. 교정 당국은 남녀 수용자를 유사한 시설에 수용하고 있으나 각각의 시설은 남녀 성별의 차이에 따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특수하게 설계되어 있다. 일례로, 여자교도소의 경우 여성 건강과 연례 건강검진을 위한 진료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재소자와 수용자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면회와 종교 활동이 허용된다. 관계 당국은 수형자나 수용자가 검열을 거치지 않고 사법 당국에 청원을 제출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 비인도적인 실태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관계 당국은, 당사자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 비인도적인 실태를 수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서화했다. 정부는 교도소와 구치소 실태를 감시했다.

재소자 옴부즈맨 제도는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재소자는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교도소 내 가혹 행위에 대한 진정을 신청할 수 있다. 12월 현재 총 212건의 진정이 법무부에 접수되었으며 법무부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그 중 1건에 대해 구제 결정이 내려졌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각, 각하 혹은 이첩 결정이 내려졌다.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진정이 접수된 74건 중 1건에 대해서는 구제 결정이, 17건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이, 51건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이, 5건에 대해서는 이첩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에 지부를 운영하고 있는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당해 연도 중에 교도소 시찰을 요청하지 않았다.

관계 당국은 교정 기록을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관리하고 있고 보존 기한은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30년이 경과한 기록은 체계적으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다.

비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대체 판결을 의무화하는 법적 절차는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개별적인 사건에 따라 벌금·사회봉사·집행유예 판결이 일상적으로 내려지고 있다.

d. 임의적 체포 또는 구금

임의적 체포와 구금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를 준수했다. 다만,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의도된 행위를 한 자를 구금·체포·수감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당국에 부여하고 있다. 비정부기구들은 금지 행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국보법의 철폐 혹은 개정을 줄곧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원이 법조항의 임의적 적용을 배제하는 엄격한 해석을 통해 판례를 제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월에 대법원은 검찰이 2008년에 북한 공작원을 접촉하고 북한 지도자 김정일을 찬양하는 문건을 배포한 혐의로 2010년에 유죄가 확정된 시민단체 회원 4명에 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하급 법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에서 피고 2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2명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경찰 및 보안 기관의 역할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으며 국내치안을 담당한다. 민간 정부는 경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정부는 직권남용과 부패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효과적인 장치를 갖추고 있다. 당해 연도 중에 보안 기관이 관련된 면책 조치는 보고되지 않았다.

체포 절차 및 수형자의 처우

현행범인 경우, 또는 영장 발부 절차를 따를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신속한 체포가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구금·압수·수색은 법에 의해 영장이 요구된다. 이 경우 담당 검사 또는 경찰관은 피의자 체포 직후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한다. 경찰은 경찰서에 임의 동행한 자를 6시간 이상 심문할 수 없다. 구속 후 20일 이내에 기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국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하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10일 연장을 허용한다.

보석 제도가 있다. 인권변호사들에 따르면, 당국은 중범죄로 기소된 피의자, 도주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자, 혹은 주거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게

일반적으로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한다.

경찰 심문 등의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 접견에는 제한이 없지만 변호인이 심문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누설하여 심문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호인의 심문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의 변호인 선임권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 기간 중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서 공판 전 기간 중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피구금자는 정부에 국선변호인을 요청할 수 있다.

구금 기간 중 가족 면회는 수사 중인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달랐다. 변호인 접견권이 거부되었다는 보고는 없었다.

자의적 구금: 7월 말 현재 관계 당국은 국보법 위반 혐의로 10명을 구속하고 그 중 6명을 기소했으며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법원은 기소자 중 2명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으며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심리가 진행되고 있었다.

1월에 경찰은 북한 정부와 지도자를 찬양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게재한 남성을 체포했다. 이 남성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부인

사법부의 독립성이 법으로 보장되며, 정부는 일선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했다.

재판 절차

무죄추정주의, 자백의 증명력 제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상소권, 소급효 금지의 원칙과 일사부재리 등 형사재판 피고인의 권리를 법으로 규정한다. 재판은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지만, 판사가 방청인이 재판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배심원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배심원 평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국가가 비용 부담). 피의자가 구속 수감 중인 경우, 1심 판결은 구속 후 6개월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대체로 판사들은 검찰측과 피고인측 모두에게 증인 심문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 피고는 출석해 변호사와 상의할 권리가 있고, 반대 증인에게 반박하거나 질문할 수도 있으며, 자신을 위해 증인과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다. 피고는 정부가 보유한 관련 증거를 열람할 수 있다.

정치범 및 피구금자

법무부는 현재 단지 정치적인 신념만을 이유로 구금되어 있는 사람은 없다고 발표했다.

법에 따라 모든 성인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병역 기피자는 법률상 구분이 되지 않는다. 위반자는 최고 3년의 징역에 처해진다. 여호와의 증인 산하 기구인 워치타워인터내셔널은 12월을 기준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자 761명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평균 18개월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12월에 워치타워인터내셔널은 155건의 대법원 항소 사건과 15건의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중 2건은 예비군과 관련된 사건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2011년에 이 문제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민사 사법절차 및 구제방법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사절차가 갖춰져 있었으며, 국내 법원 명령 집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시민은 법원에 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중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잘못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적, 사법적 구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f. 사생활, 가정, 주거 및 통신에 관한 자의적 침해

위와 같은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를 준수했다. 도청방지법은 정부가 범죄수사의 경우 최장 2개월, 국가안보 관련 사안의 경우 최장 4개월간 전화, 우편 및 기타 통신 수단을 감시할 수 있는 상황을 폭 넓게 규정하고 있다. 국정조사 자료에 의하면, 법원이 허가한 감청 건수는 2010년 상반기 589건에서 2011년 상반기 현재 58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정부는 보안관찰법에 의거해 계속 일부 출소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경찰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정부가 국가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할 경우, 국보법은 가정 내 북한 라디오 청취 또는 북한 서적을 읽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나 본 금지규정의 집행 사례는 거의 없었으며, 가정에서 북한 위성방송을 시청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제2절. 시민적 자유의 존중

a. 언론 및 출판의 자유

언론 및 출판의 자유 현황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법으로 보장하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를 존중했다. 독립적 언론, 효과적인 사법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민주적 정치 체제가 어우러져 언론 및 출판의 자유가 확보되었다.

검열 혹은 언론보도내용 제약: 독립적인 언론이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전반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제약 없이 표현되었다. 그러나 국보법에 입각하여 정부는 반정부적인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을 찬양 혹은 선동하는 사상의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

3월 21일에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2010년 5월에 한국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상황의 진전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으며 명예훼손(보고서의 표현에 따르면 “...근본적으로 가혹하며 불공평하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선거 혹은 입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유포를 통제하며 불온 서적을 금지하는 법률에 대해 구체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다.

9월에 대법원은 검찰측 항소를 기각하고 MBC 시사 프로 PD수첩의 PD 4명과 작가 1명에 대한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의 무죄 판결을 재확인했다. 5명의 제작진은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09년에 기소된 바 있다.

인터넷의 자유

정부는 인터넷 접근을 일부 제한했으며 정부가 이메일과 인터넷 대화방을 모니터링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월 언론 보도에 의하면, 40여명의 시민이 온라인상에서의 활동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정부는 폭력 사이트, 외설 사이트, 도박 사이트, 기타 법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장기·식품·의약품 불법 거래, 지적재산권 침해, 자살 모의·조장 행위가 포함된다. 또한, 정부는 북한 웹사이트와 북한 유튜브 채널 및 트위터 계정으로의 직접 접근을 계속 차단하고 있다.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지만 링크를 게재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그러한 웹사이트에 관한 정보를 배포하는 행위는 국보법에 의해 여전히 불법으로 간주된다. 일례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관계 당국은 2010년 9월에 웹사이트 운영업체들을 상대로 8만 건 이상의 친북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

12월에 방송통신위원회는 SNS,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광고를 감시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신설된 조직은 외설물, 허위 정보 유포,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국보법·청소년보호법 위반, 기타 범법 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게시물을 적발한 경우 해당 이용자를 상대로 경고 권한을 갖는다. 불법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의 계정이 차단된다.

2010년 5월에 한국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를 수록한 3월 21일자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에서는 독립 기관이 아닌 중개 기구나 민간 기업이 인터넷상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법률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언말을 기준으로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방법을 확대하여 하루 방문자수 10만 명 이상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실명제를 의무화하는 정부의 조치가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였다. 헌법 소원을 제기한 시민단체는 기존의 하루 방문자수 기준이 30만 명이었던 점을 들어 이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학문의 자유 및 문화 행사

정부는 학문의 자유나 문화 행사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b.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를 존중했다. 공공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집회는 법으로 금지되며 정치 집회를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시위를 사전에 경찰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동 법에 입각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주최측에 통보해야 한다. 경찰은 적법하게 등록되지 않았거나 과거 폭력 시위 경력이 있는 단체가 주최하는 일부 시위는 금지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통상적으로 시위를 허가했다.

8월부터 11월까지 경찰은 불법으로 규정한 노동·정치 집회 참가자들을 해산할 목적으로

물대포를 사용했다. 집회를 주관한 측에서는 사전에 신고한 합법적인 집회라고 주장했다. 부상자나 이후 법적 조치에 관해서는 보고된 바 없다.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를 존중했다. 정부에서 정부 전복을 기도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체들의 활동은 자유로웠다.

c. 종교의 자유

「국제종교자유보고서」(www.state.gov/j/drl/irf/rpt/)를 참조한다.

d. 이동의 자유, 국내 유민, 난민 보호, 무국적자

국내 이동의 자유, 외국여행, 이민, 송환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를 존중했다. 정부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및 기타 인도주의 기구들과 협력하여 국내 실향민, 난민, 복귀 난민, 망명 신청자, 무국적자, 기타 대상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다.

국외 여행: 북한을 방문하려는 여행자는 많은 경우 사전에 통일부 방북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방북자는 정치적인 목적의 여행이 아니며 북한을 찬양하거나 한국 정부를 비난할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들은 일부 북한이탈주민에게 여권 발급을 거부함으로써 이동을 제한했다.

외교통상부는 2년 이상의 징역이 확정된 자에게는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난민 보호

망명에 대한 접근: 망명 허용 또는 난민 지위 부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난민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상적으로 망명을 허용하거나 난민지위를 부여하지 않았다.

법무부의 난민 신청 심사 인력이 증원되고 난민인정협의회가 서울출입국사무소로 이관되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통역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신청 처리가 더 빨라지게 되었다. 당해 연도 중에 정부는 42명의 난민 지위를 인정했으며 277명을 거부했다. 2010년에는 47명의 난민 지위를 인정했으며 168명을 거부했다.

7월에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에 입국한 뒤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3명에게-법무부의 불허 처분을 이례적으로 취소하여-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 원칙: 9월 6일에 경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08년에 한국에 입국한 자칭 파룬공 수련자인 중국인 진 징제와 그의 아내를 체포했다. 연말을 기준으로 관계 당국은 그의 아내를 석방했으나 진씨의 망명 신청을 거부한 상태이며 그는 본국 송환의 위협 속에서 수원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 관계 당국은 2009년 이래로 법원에서 난민/망명 신청을 거부한 파룬공 수련자 10명을 중국으로 송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취업: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자에게는 취업 허가와 함께 영주권이 부여된다.

기초 서비스에 대한 접근: 소득이 빈곤선 미만인 난민들에게는 기초생활비와 의료비가 지급된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적이 부여되는 탈북자들을 수용하는 정책을 전통적으로 시행해왔다. 정부는 당해 연도 중에 2,737명의 탈북자를 재정착시켰고, 연말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의 수는 약 23,000명에 달했다. 탈북자지원재단은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 교육비 면제, 의료 지원, 사업자금 대출, 취업 지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전국에 지역적응센터 30개소를 운영하면서 탈북자를 대상으로 지역 적응 교육을 실시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 적응을 뒷받침하고 있다.

임시 보호: 정부 지침에 의거하여 대량 난민이 발생한 경우 임시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난민’ 정의를 만족시키는 자에게는 대체 보호 수단으로서 갱신이 가능한 단기 체류 허가를 발급하고 있다. 정부는 당해 연도 중에 난민 자격을 만족시키지 못한 32명에게 인도주의적 임시 보호 조치를 취했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은 1월을 기준으로 국내에 179명의 무국적자가 체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 중 몇 명이 난민인지 혹은 현지 법률에 의해 한국 국적 취득이 불가능한 이민의 자녀인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은 이들에게도 부모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했다.

제3절. 정치적 권리의 존중: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의 권리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19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는 보통선거권을 기초로 정기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지는 선거를 통해 시민들이 이 권리를 행사했다.

선거 및 정치 참여

최근 선거: 2008년 4월에 치러진 총선은 자유롭고 공정했다.

10월 26일 재보궐 선거 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경찰은 12월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 1명 외 4명을 체포했고, 해당 의원은 사임했다.

여성과 소수자의 참여: 총선에서 각 정당 비례대표(총 의석수 54석) 후보의 50퍼센트는 여성에게 의무적으로 할당되어야 하며 245개 지역구에 대한 각 정당 후보의 30퍼센트는 여성을 공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연말에 총 299개 의석 중 45석이 여성 의원이었으며 16개 상임위원회 중 2개 위원회의 위원장이 여성이었다. 대법관 14인 중 1인, 장관 15인 중 3인이 여성이었다.

소수인종 출신 국회의원은 없었다.

제4절. 공직자 부패 및 정부 투명성

공직자 부정을 형법으로 다스리고 있으며, 정부는 형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했다. 공직자 뇌물 수수 및 선거법 위반 사례가 보고되었다. 법무부에 의하면, 7월 현재 243명의 정부 공직자가 권한 남용, 뇌물 공여, 부패, 횡령,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12월을 기준으로 법원은 국회의원 10명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를 확정하고 그 중 4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4명에게는 자격정지를,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명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무원윤리법에서는 특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형성과정까지 포함해 재산을 신고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감사원과 공직자 재산 등록 및 재산 변동을 추적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몇몇 정부 부처가 공직자 부패를 단속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연간 630억 원(약 \$5,400만)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부패 행위에 관한 고충 신고 접수와 처리를 관장한다. 당해 연도 중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약 3만 2천 건의 진정을 접수했으며 모든 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그 중 35퍼센트를 기각했다고 보고했다. 위원회는 3,014건에 대해 조치를 취했으며 과반수에 대해 대체분쟁해결 절차를 적용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며 당해 연도 중에는 2010년에 712곳이던 측정 대상 공공기관을 705곳으로 축소했다.

한국에는 정보공개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외국 언론을 포함하여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실질적으로 정보 열람을 허용했다.

제5절.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권 침해 의혹 조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

국내외 각종 인권단체는 전반적으로 정부의 제약 없이 활동했으며,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인권단체의 의견에 협조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정부 인권기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보호와 신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 기관이지만 집행권이 없으며 결정 사항 역시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사항을 조사하고 정책을 권고하며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2009년에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그리고 위원회 조직이 여타 부처와 비교할 때 상당한 규모인 21퍼센트나 축소된 사실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10주년이었던 11월에는 현지 언론에서 위원회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옴부즈맨 업무는 독립적인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청와대, 국회, 정부 부처 등 각급 정부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외국인 모두로부터 접수한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일반의 평가를 받는다(제4절 참조).

제6절. 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인종, 성별, 장애, 사회적 지위에 근거한 차별은 법으로 금지되며, 정부는 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했다.

여성

강간 및 가정폭력: 법률은 강간을 형사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 강간을 불법으로 규정한 구체적인 법령은 없지만, 법원은 배우자를 강간한 남편에게 유죄를 판결함으로써 선례를 남겼다. 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흉기를 사용하거나 집단 범행인 경우 5년 이상 징역형에서 무기형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다.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각각 5년과 3년 이상에서 7년과 5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당해 연도 중에 법무부는 9,144건의 강간 신고를 포함하여 총 19,830건의 성폭력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20,159명의 성폭력 사범이 체포되었고 3,947명의 강간 피의자와 8,883명의 성폭력 피의자가 기소됐다고 발표했다. 유죄 확정이나 형량에 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2010년의 경우 18,985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8,385명이 기소됐다.

관련 법률은 가정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국이 가해자를 상대로 최장 6개월 동안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명령은 최장 2년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 가정폭력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약 \$6,0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17,0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가해자에게는 보호관찰 처분을 내리거나 법원에서 지정한 기관에서의 상담위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률은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될 경우 경찰이 즉시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경찰은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6월 29일에 국회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과시켰으며 10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위험이 있고 즉각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률은 직권에 의해, 혹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임시보호명령에 의해 가해자에게 주거 퇴거 혹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접촉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2010년에 7,359건에서 2011년에는 2,511건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기소나 유죄 확정 혹은 형량에 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성희롱: 관련 법률은 회사와 기관들이 성희롱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했고, 정부는 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했다. 성희롱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민사상 구제 조치가 가능하다. 공공기관의 경우 행정 구제 조치도 가능하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국무회의와 국회에 보고하며, 약 15,00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출산권: 법률은 부부와 개인이 자녀의 수와 터울 그리고 출산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러한 결정을 차별에 구애받지 않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정보와 수단을 제공받도록 허용하고 있다. 숙련된 분만 보조 인력, 출산 전 산모 보호, 필수적인 출산·산후 보호 등 모성 보건 서비스와 피임 수단이 광범위하게 제공된다. 여성은 성병의 진단과 치료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었다.

차별: 여성은 헌법에 의해 남성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가족법은 여성이 호주가 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아내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혼

후에도 여성이 자녀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재혼한 여성이 자녀의 성을 새 남편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법률은 채용과 승진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기업을 처벌하고 있다. 성 차별 기업은 최고 500만원(약 \$4,30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5~64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2010년 7월 53.6퍼센트에서 2011년 7월 현재 54퍼센트로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전국 72곳에 여성 취업, 그 중에서도 특히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 훈련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의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고용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여성 근로자 고용 비율이 동종 사업군 평균의 6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채용 계획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신규 임용 공무원과 외교관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상승했다. 그러나 여성 근로자 중 상당수가 저임금, 저숙련 계약직에 집중되는 경향 때문에 남녀간 임금 격차는 지속되고 있다.

아동

출생 등록: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출생 시점에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한국 국적자여야 한다. 혈통이 불분명하거나 무국적자인 경우에도 한국 국적이 부여된다. 국내 시민단체의 추산에 의하면 2010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에 2만 명에 가까운 출생 미등록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동 학대: 2010년 현재 총 9,199건의 아동 학대 사건이 보건복지부에 신고되었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아동보호센터는 총 5,657건의 사건에 개입했으며, 이 중 75건이 고아원과 보육 시설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와 관련이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 아동에게 보호·상담·치료를 제공하는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다.

아동 성착취: 미성년자를 강간한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13세 이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범한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 외에도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전자위치확인제도와 신원공개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연령은 13세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강압이나 기만에 의해 19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은 불법이다. 8월에 국회는 성폭력 피해자들도 국선변호인을 지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개정했다.

7월을 기준으로 법원은 ‘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유죄가 확정되고 성도착증 진단을 받은 (16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성충동을 억제하는 가역적 약물 치료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법률에 의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금지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약 \$17,00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성매매에 아동이 이용되고 있다. 7월을 기준으로 관계 당국은 13~19세 청소년 1,184명을 성매매 혐의로 입건했으며 이는 전체 위반 사범의 9.7퍼센트로 추산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상담·치료·지원을 제공하는 해바라기아동센터 10곳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아동유괴: 한국은 ‘국제아동유괴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을 비준하지 않았다. 국가별 정보에 관한 사항은 국무부 보고서(http://travel.state.gov/abduction/country/country_3781.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유대주의

소수의 유대계 인구는 거의 대부분이 해외 파견 근무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반유대주의 행위는 보고된 바 없다.

인신매매

국무부의 「인신매매보고서」 (www.state.gov/tip)를 참조한다.

장애인

법률은 고용, 교육, 건강권, 기타 공공 서비스의 제공 및 기타 영역에 있어서 신체, 감각, 발달, 정신 장애를 가진 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정부는 법률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건물, 정보, 통신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률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했다. 법률은 악의적인 장애인 차별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약 \$26,000)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포괄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며 장애인의 시간제 고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의료 시스템 도입을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했다. 정부는 장애인의 기회와 접근권을 확대할 목적으로 국립재활원뿐만 아니라 6개 지역에 재활병원들을 운영하고 있다.

상시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일정 비율(정부 부처 3퍼센트, 공공기관 2.3~3퍼센트, 민간 기업 2.3퍼센트) 이상을 의무적으로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은 장애인 의무 고용 규정이 면제된다. 상시 1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1인당 53만원(약 \$460)의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을 벌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장애인 고용률이 고용 의무 비율의 5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금이 부과된다. 당해 연도 중에 관계 당국은 장애인 의무 고용 규정을 미이행한 사업주를 상대로 최저임금(매달 약 94만원 혹은 \$800)에 기초한 부담금을 부과했다. 정부는 대상 사업주를 상시 300인 이상에서 상시 100인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이 신설 규정을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시행령에는 장애인 의무 고용 실적이 부진한 사업주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고 언론에 공표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7월에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 고용 규정을 미이행한 정부 부처 및 지자체 39개, 공공기관 64개, 300인 이상 고용 민간 기업 749개, 직원 100~300명 민간 기업 1,357개의 명단을 발표했다.

1월에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10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률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에게 방문목욕, 방문간호,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정부는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에게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했다.

8월 4일에 국회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2012년 8월 시행 예정)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에 따라 장애아동 지원센터, 보육 및 간호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정부는 뇌성마비 장애인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중증 장애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연간 320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문화 프로그램과 가족 캠프를 운영함으로써 장애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했다.

7월에 한국방송공사는 공사 역사상 처음으로 시각 장애인을 아나운서로 채용했다. 이 아나운서는 522명의 입사 지원자들과 치열한 입사 경쟁을 벌인 끝에 취업에 성공했다. 방송사들은 청각 장애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자막방송과 수화통역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소수 국민/인종/민족

단일민족 국가인 한국의 소수 민족 인구가 2010년에 120만 명을 넘어섰다.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의 증가로 인하여 소수 민족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의 적응을 돕기 위해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근거한 사회적 학대, 차별 및 폭력 행위

법무부는 헌법의 평등 원칙이 동성애자·양성애자·성전환자(LGBT)에게 적용된다고 보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하고 있으며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에 관한 사건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LGBT에 대한 차별 행위에 관한 1건의 진정이 접수됐으나 이유가 없다고 결정되었다.

LGBT에 대한 차별 행위를 처벌하거나 피해자를 구제하는 구체적인 법률은 시행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정부는 LGBT에게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를 법률에 따라 처벌하였다.

군대와 사회에서 LGBT에 대한 차별은 지속되었다. 3월에 헌법재판소는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금지한 군형법 규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기타 사회적 폭력 및 차별

일각에서는 HIV 감염자나 에이즈 환자들이 심각한 사회적 차별과 부정적 인식으로 계속 고통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법률은 HIV 감염자나 에이즈 환자들에 관한 비밀유지를 보장하고 이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해 연도 중에 총 287 건의 고용 차별 신고가 접수됐다고 보고했다. 총 7 건에서 연령에 의한 차별 주장이 제기됐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중 2 건에 대해 구제를 권고했다.

외국인에 대한 폭행 사건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일례로, 5월에는 어느 남성이 자신의 외국인 아내를 살해했다. 정부는 불법 국제결혼중개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업소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제결혼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 센터를 개설했으며 외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지 시민단체와 언론 보도에 의하면 탈북자들은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재정착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차별을 받고 있다.

제7절. 근로자의 권리

a.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법률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7월에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 시행령에 의해 복수노조 설립은 허용되되 사측과의 교섭창구는 단일화해야 한다. 공익사업 종사자를 포함하여 일부 근로자의 경우 법률에 의해 단결권이 제한된다.

법률은 노조 설립을 방해하거나 노조원을 차별하는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법률은 노조에 대한 차별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의 복직을 허용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은 쟁의권을 인정하면서도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전력·용수 등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주요 방산업체 근로자는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쟁의행위가 금지된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는 국제적인 기준보다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의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노조는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조정을 거부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된다. 통상적으로 조정 기간은 일반사업의 경우 10일, 공익사업의 경우 15일로 정하고 있다. 이 기간이 경과한 후 노조원 과반수의 찬성 없이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된다. 직권중재 회부 이후의 쟁의행위 역시 금지된다. 또한, 폭력, 불법점거, 또는 시설 파괴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임금, 후생,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구체적인 관련이 없는 쟁의행위 역시 불법으로 간주된다.

쟁의 노동자는 경찰력에 의해 사업장에서 해산될 수 있으며 노조 지도자와 더불어 기소되어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법률은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보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된 사업주를 상대로 해고 근로자를 복직시킬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그러한 명령을 행하고 있다.

법률은 일부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되 예산이나 정책 입안 등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있다. 법률은 특정직공무원의 경우 6급 이하의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설 규정에 의해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근로자의 노조 선택 폭이 넓어졌으며 노조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의하면 8월 23일을 기준으로 총 398개의 노조가 신설됐다. 정부는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공공연구노동조합 등 사무직 노조를 포함하는 노조 연맹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모든 노조 연맹은 대체로 정부의 간섭 없이 운영된다.

정당에 가입하거나 특정 정당 혹은 후보자를 공개 지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등 교육직 근로자의 정치 활동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률로 인해 교직원 노조가 자신들의 입장을 천명할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을 받고 있다. 1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년 시국선언을 주도하여 정치활동에 참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159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사건을 기각했다. 하지만 상당수 교사들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월 15일에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출입국관리소 측이 미셸 카투이라 이주노조 위원장을 상대로 행한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연말을 기준으로 서울출입국관리소에서 제기한 항소심은 계류 상태였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근로자의 쟁의권이 보장되고 합법적인 쟁의행위인 경우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근로자가 여타 불법 행위에 동참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일례로, 폭력을 사용하거나 불법 행위에 동참한 근로자는 ‘업무방해죄’로 기소될 수 있다. 이 죄목은 한진 노사 분규 당시 1월부터 11월까지 크레인을 불법 점거했던 김진숙 지도위원의 사례에서처럼 노조 지도자나 쟁의 참가자를 구속하는 수단으로 흔히 이용되고 있다. 관계 당국은 쟁의가 종료되자 김진숙 위원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b. 강제노동 또는 의무 노동의 금지

법률은 모든 형태의 강제 혹은 의무 노동을 금하고 있다.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 법률을 효과적으로 시행했다. 다만, 해외에서 입국한 일부 외국인들의 경우 강제 노동을 강요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은 수천 달러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로 인해 부채노예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외국인근로자들이 기만적인 채용 관행, 임금 체불, 여권 압류를 통한 이동의 자유 제한 등 강제 노동의 징후를 보이는 근로 조건에 직면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제7.d절 참조).

당해 연도 중에 일부 언론은 뉴질랜드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하는 한국 국적 어선이 외국인근로자들에게 강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이 보도를 계기로 실태 조사에 착수했으며 연말을 기준으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었다.

또한 국무부의 「인신매매보고서」(www.state.gov/j/tip)를 참조한다.

c. 아동 노동 금지 및 최저 근로 연령

법으로 노동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가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15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중학교까지(약 15세)는 의무교육이므로 정규직 고용을 위한 취직인허증은 거의 발급되지 않았다. 18세 미만 청소년이 취업하려면 부모나 후견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용자가 미성년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시간외 근로는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인가 없이는 미성년자의 야간 근로가 금지되어 있다. 정부는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효과적으로 법을 집행했고, 아동 노동은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

d. 최저 근로 조건

관계 당국은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2010년 대비 5.1퍼센트 인상된 4,320원(약 \$3.73)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2인 가구의 월간 최저생계비는 942,197원(\$800)으로 2011년도 빈곤통계연보에 의하면 전체 가구 중 1/4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했다.

법률은 사업주에게 4시간 근무제의 경우 30분, 8시간 근무제의 경우 1시간을 근로자에게 휴식시간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주휴(週休)’로도 불리는 유급 휴가 규정 등의 일부 근로 기준이 면제된다.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1.5배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은 2주 동안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최대 48시간(3개월 동안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52시간)을 근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도 허용하고 있다. 양측이 합의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 동안 최대 56시간을 근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1일 근로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정부는 보건 및 안전 기준을 수립하고 기업들이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다.

고용허가제를 포함하여 일련의 규정들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제공한다. 고용허가를 받은 이주노동자는 특정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고 이직이 제한되지만 일반적으로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와 혜택을 누린다.

정부는 규정에 입각하여 사전적으로, 그리고 진정이 접수된 경우 사후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 12월을 기준으로 전국에 총 311명의 산업 안전·보건 근로감독관이 활동하고 있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설명에 의하면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주나 경영자의 반발로 인하여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근로 감독을 통해 적발된 하자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등록된다.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한 고용허가제 등록 노동자는 불법 취업자와 비교하여 보다 많은 권리가 주어진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11월을 기준으로 국내에 약 547,000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체류하고 있으며 그 중 약 497,000명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 근로자 중 계약직과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월 현재 전체 근로자의 34퍼센트, 약 577만 명이 비정규직 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보고에 의하면 2010년에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임금은 정규직의 약 87퍼센트에 불과했다.

정부는 제조업·건설업·농업 부문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면서 외국인근로자를 보호하고 통제할 목적으로 계속해서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관련 법률과 규정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처음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전 취업 교육을 실시하고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적응 교육을 제공하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주에게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9월 29일에 헌법재판소는 사업장 변경 횟수를 3회로 제한한 고용허가제 규정이 취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 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실직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새로운 사업주를 찾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는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8월 1일부터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사업주의 재고용신청 가능기간이 당해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만료일로부터 45일 전이었던 것에서 7일 전으로 완화되었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관한 고충민원을 해소할 목적으로 사회보장 서비스와 법적 선례를 수립했다. 당해 연도 중에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교육을 실시했으며 무료 법률 자문, 상담, 통역, 자국어 건강검진, 외국인 인권보호센터의 개설 등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생활하고 근로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에 시행되던 프로그램들을 유지했다. 보다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0개국어로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현지 언론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그들의 지위 때문에 차별을 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으며 외국인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와 한국인 노동자 보다 낮은 임금의 형태로 사용자로부터 신체적 학대와 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했다. 시민단체인 이주노동자센터에는 예술홍행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여성에 대한 가혹행위와 관련된 신고가 접수됐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체불과 관련된 신고가 5,227건 접수됐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분기별로 사망자수와 질병자수에 관한 산업재해 현황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9월을 기준으로 산업재해 건수는 총 69,06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05건이 증가했다. 사망자수는 1,58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명이 감소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재 발생을 줄이고 사업장 안전을 개선할 목적으로 교육과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대상 범위가 외국인근로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웹사이트상에서 10개국어로 교육용 모듈과 교재를 제공하고 있다.